

소비쿠폰, 골목상권 달아야 민생이 산다

특별기고

윤명희

전남도의원



반응도 많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대형 음식점, 편의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홍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점포 등에는 여전히 손님의 발길이 뜸한 것이 현실이다.

소비쿠폰 지급 목적이 단순한 소비 확대가 아닌 민생경제 회복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책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골목상권에 소비가 미치지 못한다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여론과 불신만 양산하고 정책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다.

금번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효과가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울금이 전달되고 국민 모두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 제공'과 '적시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들이 정책 시행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골목상권 등에서 소비쿠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SNS·누리집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개와 추천 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의 '적시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소비쿠폰이 휴가시즌인 8월 안에 빠르게 사용될 수 있다면 이어질 추석 연휴기간과 맞물려 내수 진작 효과는 배가 될 것이고, 이는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파생시킬 것이다.

그동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설계와 예산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민생쿠폰을 어디서·어떻게·언제 사용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시선 낮고 가까운 곳으로

필자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민생경제 정책의 방향이 가장 절실하고 어려운 곳에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조정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전체 사업체의 80%를 차지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만큼, 이제는 정책의 시선이 보다 낮고, 보다 가까운 곳을 향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 역시 단순한 개인의 만족을 넘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지지하는 연대의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이자 지역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아무쪼록 소비쿠폰의 빠른 소비에 따른 효과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민생이 살고, 마침내 대한민국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1차 지급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소비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1차 막바지 뜨거운 국민적 관심

시장의 공급과 수요자인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정부의 민생회복 대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소비쿠폰 지급 첫 주에만 3,967만 여명(78.4%)이 신청할 만큼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거웠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심리와는 달리 골목상권 등 현장에서는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기고

전하영

광주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 주임



내가 고른 기부, 나를 닮은 변화

모금을 진행 중이다. 연말 중 실시하는 '희망나눔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통해 현금과 현물 기부가 진행된다.

주변의 가게와 병원, 교회 입구에는 사랑의 열매 로고와 함께 '착한가게'라고 적힌 현판을 볼 수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표적인 개인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게'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3만원 이상 정기 기부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에 동참하면, 착한가게 현판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여름철 복날 삼계탕 나눔 사업이나 돌봄 아동의 영양결핍 예방 사업 등 기부를 하는 해당 동네의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달 전국 위치한 착한가게가 누적 5만호 가입에 도달하며 새로운 기점을 맞이했다. 착한가게 5만 번째 가입자가 광주 양동시장에 위치한 '1969양동통닭'이다.

착한가게 외에도 착한가정, 착한팻과 같은 다양한 개인 정기 기부 프로그램이 있다. 착한가정은 가족이 매월 2만원 이상, 착한팻은 반려동물 이름으로 매월 2만원 이상 매월 정기 기부에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기부자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일원으로, 또

는 자신이 공감하는 분야를 고려하며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순하게 '기부를 했다'는 행위를 넘어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했다'는 자율성과 주도성은 기부자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다. 기부자가 느끼는 영향력과 연결감을 키워 긍정적인 동기 발현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부자로서의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특별모금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나눔 히어로' 나눔리더·나눔기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 기부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시로 100만원 이상의 기부를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은 모두 동네 나눔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히어로, 곧 영웅이 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며 사는 삶, 그것이 열심히 사는 삶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나눔의 여정에 함께 하길 추천해 본다.

나눔은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부를 마음 먹은 당신은 이미 우리 모두의 '착한 히어로'가 되기에 충분하다.

열심히 산다는 것,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한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 열심히 사는 인생을 실현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랑의열매)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118억원을 모금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목표 모금액으로 119억원을 설정해

특지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입법 보완 등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가족, 연인 등 가까운 특정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 발생하기에 재발 위험성 및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

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 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 8,39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에서는 모든 관계성 범죄 신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적,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안전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반복되는 폭력의 사슬을 끊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인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6천억 확보 'AI 중심도시 광주' 현실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총사업비 6,000억 원 규모의 AI 2단계 AX 실증 밸리 조성 사업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AI 2단계 사업은 지난 5년간 4,300억 원 규모로 추진했던 국가 AI 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에 AI를 입히는 사업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AI 시대가 되면서 AI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2단계 사업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가 최종 확정되며 하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모두의 AI와 도시 생활 혁신, 지역 전략 산업 AX,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 6,000억 원 중 3,000억 원은 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 AX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또 2,000억 원은 민주주의, 교통, 돌봄, 안전 등 도시문제를 시민 생활 전반을 혁신하는 데 쓰이며 1,000억 원은 단순 기능 실증을 넘어 AI 상용화를 위한 AI 인스페이스 조성에 사용한다. 광주시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복지시

설·공원·주차장 등 3,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 랩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 장비 3,879종을 기업 실증용으로 제공한다. 또 내년에 시행되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연구개발·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신속 행정, 세제 지원을 포함한 AI 규제 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지에도 나선다.

이는 시민 체감형 연구개발과 도시 생활 전반을 바꾸는 도시생활형 과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시의 일상에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올 수 있다. 광주시가 AI를 너무 빨리 추격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으나, 결국 광주시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다.

이번에 광주시가 AX 실증 밸리 조성 사업비 6,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 시 공무원과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친 성과라고 한다. 광주시와 지역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글로벌 대학 선정마저도 호남 홀대하나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대학' 선정이 영남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지역 대학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아 대학들의 박탈감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 선정을 앞두고 기존의 선정 지역을 고려한 지역 안배가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혁신성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 글로벌 역량 등을 기준으로 2023년과 2024년 선정된 글로벌 대학 20곳 중 영남권은 11곳인데 비해 호남권은 목포대와 순천대 등 4곳에 불과했다. 충남권과 강원권도 각 2곳이었다. 광주를 비롯해 대전·세종·제주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영남권 4곳은 경북 4곳, 경남 3곳, 부산 2곳, 대구·울산이 각 1곳이었다.

상황이 이리자 영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불만이 쏟아졌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글로벌 대학 선정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수도권과 지방에 이어 지방과 지방간의 불균형까지 부추겼다는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올해(2024년)까지 총 2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했는데, 절반 이상인 11곳이 영남권으로 특정 지역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많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이후 조 교육부 장관은 "큰 원칙에서 혁신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지역 편중 현상이 일어났 것 같다. 아직 선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문제 제기에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글로벌 대학의 혁신 선도 역할을 고려해 혁신성과 실행 가능성 평가는 확고히 견지하되, 본 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할 경우 시·도별 지정 현황을 감안해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지역 안배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올 9월 마지막으로 발표할 글로벌 대학에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3곳이 예비 지정에 포함돼 있다. 이들 대학이 10곳을 선정하는 본 지정에 반드시 포함돼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고 지역 안배와 균형이 이뤄질지 기대한다.

사진 속 세상



제주의 감자 심는 풍경

19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씨감자를 파종하고 있다. 연합뉴스